



자주적 평화통일  
갈망한 진보적  
민족주의자

김영희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교수

조용수(趙鏞壽)

(1930~1961)

“국제저널리스트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 집행위원회는 평화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해 투쟁한 용감한 투사로 이상을 지닌 성실한 저널리스트 활동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한국의 저널리스트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씨에게 1961년도 국제 저널리스트상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수가 처형된 후 1962년 1월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된 국제저널리스트기구 정기회의에서 회의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조용수에게 국제기자상을 주면서 밝힌 수여 이유였다.

정진석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언론 역사에서 한 신문사가 폐간 처분되고, 그 발행인이 처형되는 극단적인 탄압을 받은 경우는 민족일보와 그 사장 조용수가 유일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김민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당면한 급박한 과제 두 가지가 있었다. 대내적으로 쿠데타에 대한 대학생과 진보주의자들의 저항 가능성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박정희 자신과 그 가족의 공산당 관련 경력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 해소 문제였다. 이 두 문제 해

“냉정한 통찰력을 지닌 언론인이었고, 민족을 생각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통일운동가” 조용수는 100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혁신적인 논조의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사장으로 활동하다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한지 이틀 후인 5월 18일 쿠데타세력에 연행되어 사형이 구형되고, 그 해가 가기 전인 12월 21일 처형되었다. 그의 나이 만 31세였다.

결을 위해 박정희세력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이른바 용공분자를 색출 소탕하기 시작했는데, 민족일보와 조용수는 그 작업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민족일보와 조용수에 대한 탄압은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세력의 정략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원희복이 “냉정한 통찰력을 지닌 언론인이었고, 민족을 생각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통일운동가”로 평가한 31세의 젊은 진보적 민족주의자 조용수는 100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혁신적인 논조의 민족일보를 창간하여 사장으로 활동하다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한지 이틀 후인 5월 18일 쿠데타세력에 연행되어 사형이 구형되고, 그 해가 가기 전인 12월 21일 처형되었다. 그의 나이 만 31세였다.

젊은 나이에 죽은 그에 관한 문헌은 드물어 원희복이 쓴 ‘민족일보사장 조용수 평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언노련총서 002, 1995)과 이를 보완한 ‘조용수와 민족일보’ (새누리, 2004)가 있다. 조용수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가 발행한 신문을 연구한 김민환의 ‘민족일보 연구’ (나남출판, 2006)도 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2001년

조용수 사장 40주기 추념 학술회의 자료집에 발표된 4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고, 그밖에 관련 논문들이 더 있다.

### 쿠데타 세력의 정략에 희생

조용수는 1930년 경남 진양군 대곡면 양반가문의 4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진주중학교에 다니다 해방이후 교내 좌우익 갈등으로 자퇴하고, 대구 대륜중학에 편입하여 졸업했다. 졸업 후 연희전문 정경학부에 입학한 것이 1950년이었다. 그러나 바로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부산으로 내려가 외삼촌 하만복 국회의원의 경호비서로 있었다.

6·25전쟁은 그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다. 전쟁으로 중단된 공부를 일본에서 계속하기 위해 1951년 9월 전쟁에 참여했던 재일학도의용군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배를 탄 것이다. 그는 메이지(明治)대 정경학부 경제학과 2학년에 편입했다. 3학년을 수료한 뒤, 1954년 재일본 한국거류민단에 들어가 중앙총본부의 조직부차장이 되었고, 이어 민단기관지 민주신문의 편집부장과 논설위원으



서울 정동 민족일보사 앞에서 회사 관계자와 함께한 조용수 사장(가운데)

로 활동했다. 조용수가 민단내의 진보파로 활동하자 친이승만 계열의 민단은 그를 좌천시켜 1959년 도치기현의 부단장으로 보냈다.

1960년 4·19민주화운동으로 이승만정권이 물러나자, 그는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혁신운동에 참여해 7월 29일 민의원 총선거에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일본에 돌아간 그는 혁신세력을 대변할 신문발행을 계획했다. 조용수는 1961년 12월 초 다시 서울로 돌아와 신문창간을 준비하면서, 분열된 혁신세력을 통일시키는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민자통)에 중앙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1961년 1월 민족일보사의 사장으로 취임하고,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

했다. 5·16군사쿠데타세력에 의해 연행된 후 사형이 구형되고, 그해 12월 21일 처형되었다.

일본에서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로 성장한 조용수는 1960년 4·19민주화운동이후 귀국하여 민의원 총선거에 혁신정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3위로 낙선했다. 다시 일본에 간 그는 한국의 대중에게 혁신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려 혁신세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문창간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는 이영근과 의논하여 제일교포를 상대로 신문발행 자금을 모금했

다. 이영근은 조봉암의 비서출신으로 진보당 사건 때 병보석으로 출감한 뒤 일본에 망명해서 도쿄에서 통일조선신문을 발행하며 반 이승만 운동을 벌였는데, 조용수의 진로와 정치이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거류민단계 제일의 재력가 박용구, 진주중학 동문들, 부호였던 장인 등이 신문발행 자금을 지원했다.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 조용수는 1961년 12월 초 서울로 돌아왔다. 1961년 1월 혁신계 인사들이 모여 신문제호를 민족일보로 정하고, 조용수가 사장을 맡게 하였다. 신문자금 모금을 큰 역할을 하였고, 특정 파벌에 기울지 않으면서 참신하고 유능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민족일보가 창간되고, 폐간된 1961년 공보부의 자료에 의하면 동아가 23만 3,774부, 한국 17만 4,565부, 조선 13만 3,368부, 경향 8만 185부, 민국일보가 4만 532부를 발행했다. 창간 첫해에 민족일보가 가두판매만으로 4만 여부나 팔린 것은 당시 독자들이 얼마나 크게 호응했는지 말해준다.

조용수는 서울 정동에 있는 월간잡지 '희망'의 건물과 시설을 인수하고, 1961년 1월 25일 자본금 5,000만 원의 주식회사 민족일보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주필 겸 편집국장에 민자통의 통일방안심의위원회 정치분과위원 이종률, 취재담당 부국장 겸 사회부장에 경향신문 사회부장 출신의 오소백, 편집책임 부국장에 서울신문 편집국장 출신 권일하를 영입했다.

### 혁신세력을 대변한 민족일보 창간

이렇게 하여 2월 13일 창간호가 나왔다. 창간호에 게재한 사장취임사에서 조용수는 일부 몰지각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자신을 '조련계' 운운의 낭설로 모함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조련계'와는 계열을 달리하는 '거류민단'에서 일해오던 과정에서 조국의 분단을 영구화시키고 거기서 전쟁위기를 빙자하여 갖은 수법으로써 대중박해를 일삼고 특권을 보수하려는 이승만 도당을 발제하여야 한다고 지각하고 일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족일보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위적인 장벽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은 상호간의 적시와 골육상쟁에 뒤이어 심각한 빈곤만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민족의 긍지를 저버리고 외세에 의존하여 15년간의 세월을 헛되게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일보는 이러한 민족의 분열과 비원을 영속화 시키는 일부의 작용에 대하여 온갖 정력을 기울여 싸울 것이며 특히 적극적으로 남북간 민족의식의 추진과 생활 공동체적 연대를 추구하는 데 있는 지면을 과감하게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일보는 이와 같은 신문이 지향하는 방향을 창간호에서 마지막 호까지 제호 옆 1면 상단 왼쪽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 민족일보는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 민족일보는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 민족일보는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

이런 편집방침으로 민족일보는 창간하자마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보수성향의 신문이 지배했던 언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독자



1961년 12월 21일 조용수 사장의 사형직전 모습

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제 민족일보는 처음에 2만 부를 발행했으나, 곧 4만 5,000부까지 발행했다고 한다. 특히 가두판매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 거리에서 4만여 부가 “불티나게” 팔렸다.

민족일보가 창간되고, 폐간된 그 해 1961년 9월 공보부 조사국의 자료(가구 배달 보급부수에 기관과 기관보급부수로 30% 추계한 발행부수)에 의하면 당시 동아일보가 23만 3774부, 한국일보가 17만 4565부, 조선일보가 13만 3368부, 경향신문이 8만 185부였고, 민국일보가 4만 532부 발행했다. 이런 실정이었는데, 창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족일보가 가두판매만으로 4만여 부가 팔린 것은 당시 독자들이 얼마나 크게 호응했는지 말해 준다.

한편 혁신계 신문의 출현을 달가워하지 않은 당시 장면내각은 신문창간이 구체화 되어가자 신문자금이 조총련 자금이라는 의혹을 갖고 신문자금 출처에 대해 은밀히 내사를 벌였다. 국회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민족일보 신문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살펴본 민족일보 창간호의 조용수 사장 취임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일보는 총리 공보비서였던 송원영이 “민족일보는 창간 직후부터 계속 도각(倒閣)공세를 폈다”고 할 정도로 잘못된 정부정책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가판만 4만여 부 팔릴 정도로 독자 호응 커

이와 관련 신문사 내에서 조용수를 비롯한 혁신계 인사들이 신문편집에 너무 간섭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오소백 부국장과 일부 기자들이 사임했다. 국내실정을 잘 모르는 조용수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논조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민족일보가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쇄를 맡은 서울신문사가 예고도 없이 인쇄를 거부해 3일간 신문을 발행하지 못했던 것도 그런 갈등이 표면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 후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이고, 혁신세력을 대변한 민족일보의 논조가 재일교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민족일보의 대일수출도 허가하지 않았다.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사건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는 피해자 조용수 및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명예를 회복시키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조용수의 처형이 사법살인(司法殺人)이라는 주장이 사실이었다.

그 무렵 정부는 혁신세력을 제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데모규제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이에 대학생과 혁신세력들이 이른바 2대 악법 결사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3월 22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쉼기대회에 조용수도 연사로 참여해 “반민주악법은 언론탄압의 독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민족일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조용수는 개인적으로 진로를 고민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 아내를 두고 한국에 온 후 신문창간으로 아내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로 있는 사촌형이 잠시 귀국했을 때 그에게 한국의 정세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국에 와서 공부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그는 고민 끝에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4월 들어 은밀히 유학을 준비했다.

그런 상황에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이 주도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이틀 후인 5월 18일 민족일보사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조용수를 비롯한 간부 9명을 연행한 것이다. 다음 날 군사혁명위원회 장도영위원장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엄단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령 18호를 발표하

였다. 이 포고령을 발표한 5월 19일 민족일보는 사실상 폐간조치 되었다. 혁명검찰부는 7월 23일 민족일보 관련자 13명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

#### 조용수 약력

1950년	하만복 국회의원 보좌관(경남 경찰국 경사)
1953년 5월 30일	재일본 한국학생동맹(한학동) 문화위원
1954년	재일본 한국거류민단 중앙총본부 차장, 민주신문 상임 논설위원
1959년 12월	민단 도치기현 부단장
	재일한국인 북송반대 도치기현 위원장
7월 29일	사회대중당 국회의원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출마, 낙선
1961년 1월 15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준비위원회 중앙준비위원
1월 25일	주식회사 민족일보 설립, 사장
2월 13일	민족일보 창간
3월 20일	반민주악법 반대 대강연회 연사로 “반민주악법은 언론탄압의 독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제목의 연설
3월 27일	산업은행 서병수 등 은행장 7명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5월 18일	경찰에 연행
8월 12일	사형 구형
12월 21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사형 확인 교수형 집행
1962년 1월 13일	국제저널리스트기구 1961년도 국제저널리스트상 추서 결정

별법 6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8월 12일 1심 판결에서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이북 괴뢰집단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다. 1심 판결이 진행될 때부터 국제사회에서 재판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사형수들의 감형을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송지영, 안신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지만, 조용수는 1961년 12월 21일 처형하였다.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사건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는 피해자 조용수 및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명예를 회복시키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 진보언론 방향에 대한 교훈

이 결정은 5·16 쿠데타 이후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한 전면 부정을 의미한다. 조용수의 처형이 사법살인(司法殺人)이라는 주장이



## 조봉암 구명 운동 주도한 협객

조용수 일화

조용수는 남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의협심이 많았고, 그런 마음을 실제 행동에 옮긴 인물이었다. 그런 일면들은 여러 사례로 확인된다.

그가 일본의 한국거류민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1959년 2월 7일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민단 주요 인사들이 '조봉암구명위원회'를 조직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일본 교포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승만 정부에 보냈는데, 이 서명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조용

수였다.

그러나 7월 31일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조봉암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승만의 정치적 상대를 사형시킨 한국정부의 처사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이승만의 영향을 받던 민단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봉암 추도회를 개최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1959년 2월 일본 정부가 재일교포를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하자, 조용수는 재일한국인복숭반대 도치기현 위원회 위원장으로 복숭반대투쟁에 적극 참여했다. 주

사실이었던 것이다. 처형된 지 45년이 지나서야 “훌륭한 구국의 이념과 명석한 머리를 가진 유능한 청년”이며, “단지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갈망했던” 조용수의 처형이 얼마나 부당한 처사였는지 밝혀진 것이다.

이만섭이 평가하듯 “그의 죽음은 박 장군이 본인의 사상적 문제를 의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사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따라 민족일보진상규명위원회 조용준 위원장(조용수의 동생)은 2007년 4월 재심 절차를 밟아 11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

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민족일보의 논조가 전술적인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족일보가 반공을 전제로 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했으나, 실제 일부 보도와 논평, 논설에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입장에서 민족일보가 너무 급진적이고, 대중을 선동한다고 인식하게 한 측면도 있었다. 민족일보의 단명과 사장 조용수의 처형은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진보언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일, 주미대사와 외무장관을 지낸 김동조는 “민단 행동대원들은 동경지역 등 각지의 복송자들이 니가타로 떠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각지의 역선로에 드러눕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경찰의 투입으로 저지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긴 했지만 민단측의 열렬 청년들은 정말 생사를 건 투쟁을 했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의 후원금 한 푼도 없이 대다수 일본인들의 적대적 태도와 냉대를 감수하면서 순전히 자발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였던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조용수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는 또 한국에 돌아와 민족일보를 발행하면서 시간이 나면 독립운동의 원로들을 찾아다녔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친 원로들의 비참한 생활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다.

조용수는 아예 1961년 민족일보의 올해의 사업을 ‘혁명유족 구호운동’으로 정했다. 신문 만들기도 벅차

자금을 빌리러 다니면서도 가난한 독립유공자들을 도우려 한 것이다. 민족일보 기획부장으로 있었던 동생 윤준이 “형님, 회사내 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신문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호소라고 해요. 당장 우리 형편도 어려운 판에”라고 말할 정도였다.

민족일보 상임감사였던 안신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원로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웠다. 지금처럼 원호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거 대단히 훌륭한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호구지책을 위해서 지조와 절개를 잃는 경우도 있었다. 조용수는 독립운동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했다. 현재 광복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애국동지원호회를 찾아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취재차량을 동원해 독립운동의 원로들을 몰래 찾아다니며 도와주었다.”